



K-로봇자원을 위한 대형 실증 기반(인프라) 내년에 만든다

- 올해 8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천억 규모 예비타당성 통과
- 산업부, 대구시, 로봇진흥원 등 전담반(T/F) 가동, 연내 세부계획 마련 후 내년 초 본격 실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1월 2일(목), 대구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준비 전담반(T/F)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은 로봇산업계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개발 단계 로봇의 업무 수행능력, 안전성 실증 등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로봇제품이 사업(비즈니스)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형 실증 기반(인프라)*으로, 5년간('24~'28) 약 2,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8월 23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였다.

* 사업 규모 : 1997.5억 원(국고 1305억 원), 사업 기간 '24~'28년, 조성지역 : 대구(면적 166,973m)

이번 전담반(TF) 가동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우리 첨단로봇산업 육성과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사업(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인 기반(인프라)이 되는 만큼, 사전에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업계현장의 요구에 맞게 보완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 최대한 빠르게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이다.

전담반(TF)에서 산업부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활용한 로봇산업 육성 등 정책 연계 강화, 대구시는 부지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산기평은 업계 수요에 기반한 실사용 평가(테스트필드) 상세 추진계획, 진흥원은 실사용 평가(테스트필드) 자립화 방안과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로봇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로봇 실사용 평가(테스트필드)의 산업지원 기반(인프라)으로서 기능과 효과를 최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주기적으로 전담반(TF) 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미래 첨단로봇산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기반(인프라)이 될 것인 만큼,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성공적인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내 '첨단 로봇산업 전망(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신속한 규제개선과 연구개발(R&D) 등의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책임자	과 장	조웅환 (044-203-4310)
		담당자	사무관	박형태 (044-203-4318)